

8월 실시예정 한미 UFG '유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한미 국방부, 北 비핵화 협상 전제로... 합의 진전 없을 경우 되돌릴 가능성도

한미 국방부가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의에 따라 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이번 UFG연습 일시 중단에 대해 '중단'이 아닌 '유예(suspend)'라고 발표한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 결과에 진

전이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단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일종의 스냅백(Snap back) 조항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예' 조치와 관련해 "훈련은 일단 중지하는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의의 대화' 진행을 단서조항으로 단 것이다.

아울러 이번 연합훈련 일시 중단 조치는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결단

을 촉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2년 당시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인 '팁스퍼리트' 훈련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대가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북미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향후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연합훈련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월 대규모 연합훈련(키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의 중단·재개여부는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국방장관급 회담인 SCM은 해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1993년 팁스퍼리트 훈련 재개도 SCM에서 결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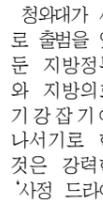
군 당국은 현재 후속 훈련에 대한 중단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문 정부 2기 새 동력

지방정부·의회 정조준 '사정 드라이브' 박차

최우선 국정과제 '지방분권' 성공 위한 사전 정치작업



청와대가 새로 출범을 앞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기강 잡기에 나서기로 한 것은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문재인 정부 2기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발판 삼아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을 연장선상에서 국정운영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힘을 사정에 두고 계속해서 현재의 국정지지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2기 국정



운영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강도 높은 청와대와 정부 감찰, 지방권력 단속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조 수석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때 구성됐던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캐내기 위한 감찰이 아니라 새로 들어설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찰 대상과 관련해 "꼭 지방정부가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아울러서 얘기한 것"이라며 "이전 지방정부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들어선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지방정부를 말한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감에 도취되지 해이해지거나 쉽게 긴장이 풀어지는 경우를 미리 사전에 다잡고 경각심을 높이지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의 혁신기(문재인정부 1기) 동안 권력형 적폐와 생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2019년부터 2년 동안의 도약기(문재인정부 2기)는 지방정부와 의회에 쏠려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청산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철저

지 계산된 행보라 할 수 있다. 비록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자

치 지방정부 출범 초반에 부정부패가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이 꿈꾸던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도 사전 내부 단속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이고, 그 중심에는 부정부패의 청산이 놓여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중요한 국정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높은 도덕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면 도덕성이라는 면에서 늘 사고들이 생기곤 했다"며 "그만큼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초심도 잃게 되고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문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등 감시 청·정부 감찰, 지방권력 단속 등 주문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이어야" 강조

도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전북도의회(의장 양용모)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5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4년간 왕성하게 활동한 의원들이 제10대 의회를 돌아보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2014년 7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금년까지 총 1,341건을 발의하여 의원 당 평균 35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이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 2023세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프비 지원 조례안」,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등 총 18건(조례안 15, 동의안 3)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북미 정상회담 성과 토론회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3연임



정의당 20대 국회 3기 원내대표에 노회찬 의원이 선출됐다. 2016년 1기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3연임'이다.

정의당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3기 원내대표에 노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노 의원 경남 창원·성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뉴시스

군산 옥서 배수개선 농림부 신규 사업지 선정 쾌거

김관영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될 것"

국회 김관영 의원은 19일, 2019년도 농림부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에 군산 옥서지구가 최종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림부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농어촌공사가 실제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실시하는 기본조사를 일찌감치 마친 군산 옥서지구는 지난해 예상 밖에 최종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가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김진성 기자

본인의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1년간 농림부 장차관과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수차례 사업 설명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개시되면 옥서면 옥봉리, 선연리 일원에 4.73km에 달하는 대규모 개거화장 및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는 물론 공사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